

#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격돌 예고

## 文대통령 약속에 힘 받은 개헌... 넘어야 할 3대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이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함에 따라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등 이념 논쟁과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각종 과제들을 조명해본다.

◇이념 논쟁=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에 대해 언급하면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물론 부마항쟁과 6월 민주항쟁, 촛불 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상당한 이념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지렛대 삼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서면서 대선 패배를 극복할 반전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명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내세우면서도 개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념 논쟁을 격화시키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토대로 정국 자체를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재편해 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공조를 통해 이념 논쟁의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념 논쟁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력구조 개편=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

## 5·18 헌법 수록 싸고 '진통'

## 중·대선거구·연동형 비례제

## 선거제도 개편 '뜨거운 감자'

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의원내각제 추진 입장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오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기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을 전제로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다른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며 야당 측의 주장을 조곤조곤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핵심 변수다. 국민투표를 거친다는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관련, 정치권의 이견투구가 계속된다면 또 다른 쟁점 시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개헌에 앞서 선거구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양당제를 모토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정치적 득권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다당제를 근간으로 소수정당들의 의석이 최대한 늘어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민의를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에 앞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 비례대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신임 경제·외교·안보 라인 프로필

## 상고·야간대학 나와 입법·행시 합격한 '예산통'

###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졸신화'를 써내려간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흠어머니 한 뒤 한국신학대학에 진학한 뒤 한국신학대학에 취직했다. 하지만 야간대인 국제대(현 서경대)에 다니며 공부에 대한 갈증을 풀었고, 주경야독 끝에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이듬해 3월 경제기획원(EPB)으로 옮겼다.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공직을 시

작한 그는 옛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다. 이어 2012년 기재부 제2차관, 2013년엔 장관직인 국무조정실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2015년 2월부터 총장으로 이주대를 이끌었다.

▲충북 음성(60)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 ▲미국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 비외무고시 출신...외교부 70년 사상 첫 여성수장

### 강경화 외교부장관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기구의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도주의 분야 외교 강점이다.

강 후보자가 외교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서울(62)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매사추세츠대 언론학박사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 보 겸 부조정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 외교부·정치권 경험 풍부한 다자외교 전문가

###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부와 정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다자외교·통상 전문가다.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장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단 '국민이그레임'에서 단장을 맡아 문재인 캠프 외교 정책 수립을 총괄해왔다.

▲서울(71)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 이론·실무 겸비한 사회 참여형 진보 경제학자

### 장하성 정책실장

대표적인 사회 참여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재벌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성찰과 실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연대 활동 등

을 통해 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장하성 게이브리얼대 교수와 사촌이고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 누나다.

▲광주(64) ▲고려대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 박근혜 '경제교사'서 새 정부 'J노믹스 설계자'로

### 김광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다. 2010년에는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며, 2012년에는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 디자인했다. 하지만, 2015년 박 전 대통령과 결별 선언을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문제

인 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 문 후보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했다. ▲전남 나주(70) ▲서강대 경제학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20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새로 임주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 김진표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인 그림 매각, 아들 병역 면제·세금탈루 의혹 쟁점

## 이낙연 총리 후보자 24일부터 인사청문회 검증공방

이번 주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청문 대상인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열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29일 실시된다.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은 ▲이 후보자 부인 그림 고가 매각 의혹 ▲이 후보자 아들의 군(軍) 면제 의혹 ▲이 후보자 아들

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어서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 후보자 부인 그림 매각 의혹=지난 2013년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 부인의 첫 개인전에서 그림 2점을 900만원에 사들였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를 의식해 그림을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자가 미술작품 판매로 소득을 올린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판매 시점은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이종공제 혜택 지적에는 "보좌직원의 실수"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의 군(軍) 면제 의혹=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 탈구가 됐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

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아들의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의 아들 부부가 전세금에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하면서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다"며 "이는 은행예금, 차량 매각대금,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이전) 보증금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이번) 보증금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비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기타 제품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